# 북한 7차 당 대회와 남북관계 전망

현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센터

## □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

현대경제연구원은 북한의 7차 당 대회와 향후 남북관계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통일 · 외교 · 안보 분야의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.

(김정은 체제 안정성)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불안정하다는 의견이 전년도 조사에 비해 증가했다. 2015년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의견은 14.4%(다소불안 10.1%+매우불안 4.3%)에 그쳤으나, 2016년에는 32.0%(다소불안 18.0%+매우불안 14.0%)로 17.6%p 증가했다.

(개혁 · 개방 전망) 전문가들의 김정은 시대 개혁 · 개방에 대한 기대감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. 전문가 10명 중 6명은 김정은 체제의 개혁 · 개방 추진 의지가 김정일 체제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였다. 김정은 체제의 개혁 · 개방 의지가 김정일 체제에 비해 '높다'는 응답은 28.0%로 2014년 동 질문에 대한 응답(49.6%)에 비해 21.6%p 하락하였다. 전문가들은 향후 김정은 시대의 개혁 · 개방 추진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. 북한의 개혁 · 개방 추세가 '점차 확대'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는 29.0%로 2012년 조사 대비 27.9%p, 2014년 조사 대비 13.7%p 하락하였다.

(7차 당 대회) 전문가 10명 중 8명은 군사 · 경제 부문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하였다. 이는 김정은 시대 정책 기조인 '핵 · 경제 병진노선'이 7차 당 대회에서 재차 강조될 것으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.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당 대회를 계기로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권력 집중이 강화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.

(남북관계 전망)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7차 당 대회에서 별다른 대남 유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. 또한, 올해 안에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. 전문가들은 주로 '올해 안에는 힘들 것'(57.0%)으로 응답하였으나, 8.15 계기 · 7차 당 대회 계기 · 6.15 계기 · 추석 계기 등 올해 안에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43.0%를 차지하였다. 한편,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재개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.

(북핵문제) 전문가들은 북핵이 4차 핵실험으로 '소형화 · 경량화'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응답하였다.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실시한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, 전문가들은 4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수준이 진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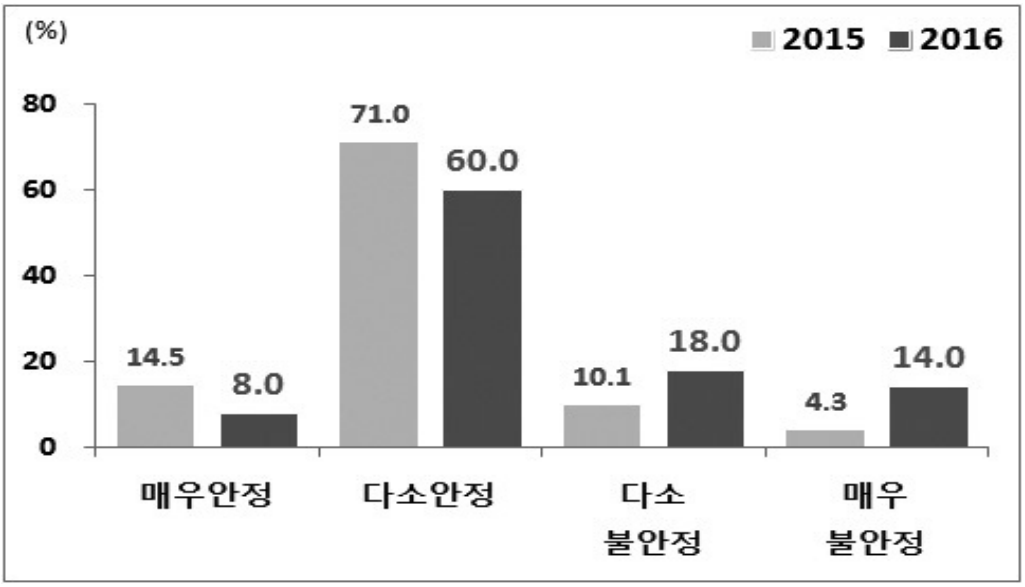
##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

현대경제연구원은 북한의 7차 당 대회 개최를 앞두고 7차 당 대회의 주요 의제와 남북관계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, 2016년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통일 · 외교 · 안보 분야의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.

### 김정은 체제 평가

'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안정된 것으로 평가하십니까?' 라는 질문에 불안정하다는 의견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.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14.4%(다소불안 10.1%+매우불안 4.3%)에서 2016년 32.0%(다소불안 18.0%+매우불안 14.0%)로 17.6%p 증가했다. 한편 다수의 전문가(68.0%)가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평가했으나, 이는 2015년 85.9%에 비해서는 17.9%p 하락한 수치[1]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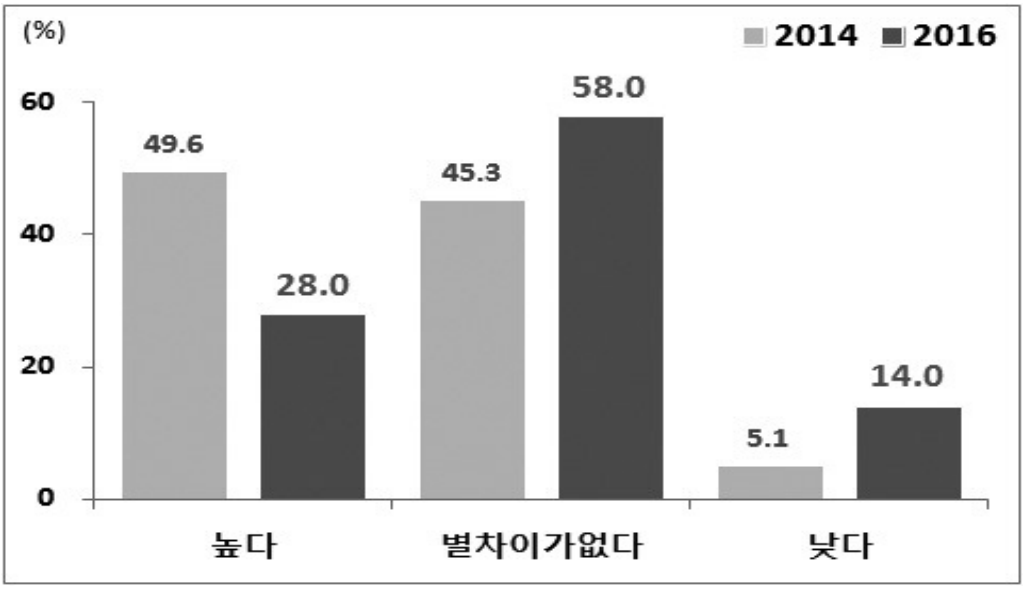
〈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평가 〉




1) 본 연구원이 2015년 4월 3일~4월 13일 (11日간) 연구원, 교수, 남북경협 기업대표 등 통일 외교 안보 전문가 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.

'김정일 체제와 비교하여 김정은 체제의 개혁 · 개방 의지가 높다고 보십니까? 낮다고 보십니까?' 라는 질문에 전문가들의 김정은 시대 개혁 · 개방에 대한 기대감은 하락한 것으로 응답됐다.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정은 체제의 개혁 · 개방 의지가 김정일 체제에 비해 '높다' 는 응답은 28.0%로 2014년 동 질문에 대한 응답 49.6%에 비해 21.6%p 하락[2]했다. 또한 전문가들의 과반 이상(58.0%)은 김정은 체제의 개혁 개방 추진 의지가 김정일 체제와 비슷한 것으로 응답했으며, 이는 2014년 45.3%에 비해 12.7%p 늘어난 수치이다. 한편, 김정은 체제의 개혁 · 개방 추진 의지가 김정일 체제에 비해 '낮다' 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14.0%로 2014년 조사에 비해 8.9%p 상승했다.

〈 김정은-김정일 체제의 개혁 · 개방 의지 비교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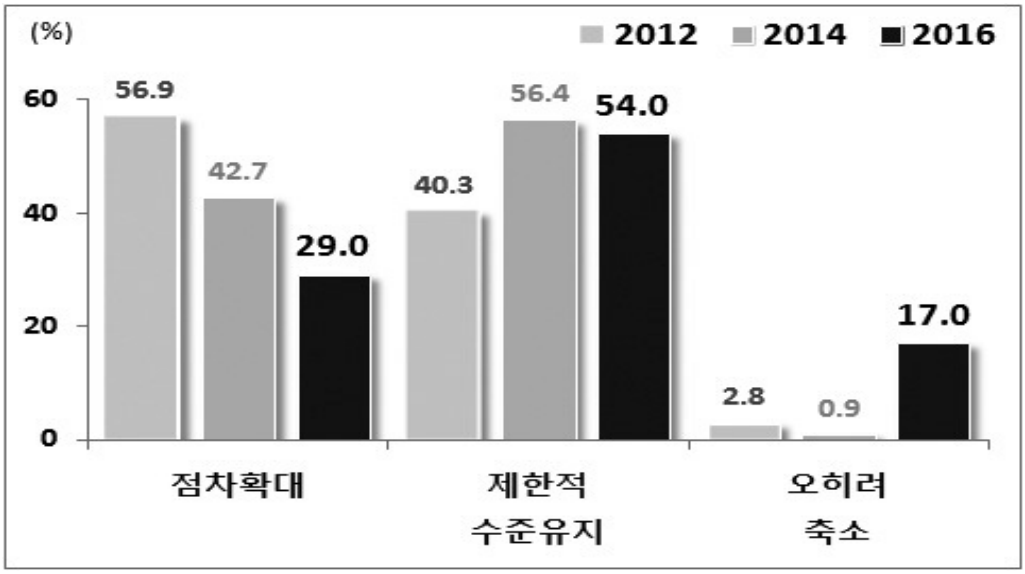



'향후 북한의 경제 개혁 · 개방 추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십니까, 혹은 축소될 것으로 보십니까?' 라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 10명 중 7명은 김정은 시대 개혁 · 개방

2) 본 연구원이 2014년 7월 4일~18일 (15日간) 연구원, 교수, 남북경협 기업대표 등 통일 외교 안보 전문가 1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.

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. 북한의 개혁 · 개방 추세가 '제한적 개혁 · 개방 등 현 수준을 유지'(54.0%)와 '오히려 축소'(17.0%) 등 부정적 평가가 71.0%를 차지했다. 한편, 북한의 개혁 · 개방 추세가 '점차 확대'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는 29.0%로 2012년 조사 대비 27.9%p, 2014년 조사 대비 13.7%p 하락[3]했다.

〈 북한 개혁 · 개방 전망 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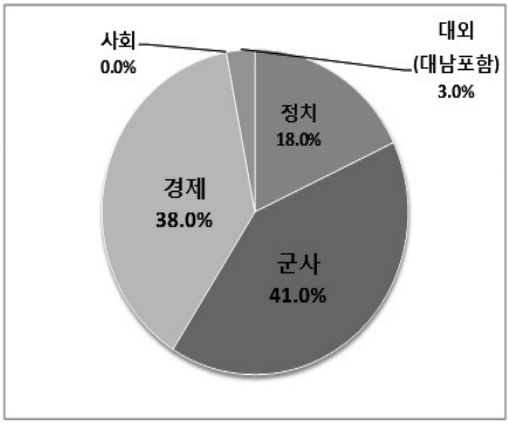

### 북한의 7차 당 대회

'금번 7차 당 대회에서 어떤 분야가 가장 강조될 것으로 보십니까?'라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군사(41.0%), 경제(38.0%) 등 군사 · 경제 부문이 강조될 것이라 응답했다. 이는 김정은 시대의 정책 기조인 '핵 · 경제 병진노선'이 7차 당 대회에서 재차 강조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. 또한,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김정은 체제가 추구하는 장기적인 경제 비전을 선보일 가능성도 있다. 그밖에 정치 분야 18.0%, 대외(대남 포함) 분야 3.0%순으로 응답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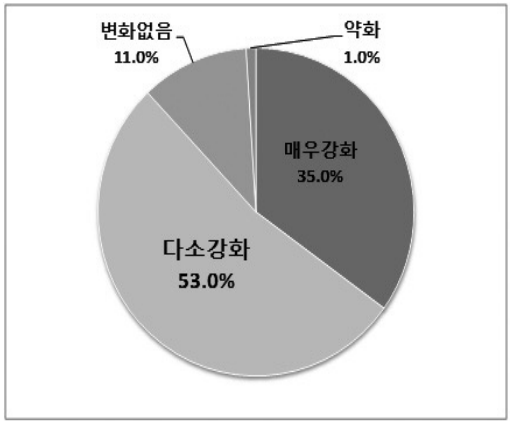
3) 본 연구원이 2012년 4월 23일~5월 3일 (13日간) 연구원, 교수, 남북경협 기업대표 등 통일 외교 안보 전문가 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.

'금번 7차 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에 대한 권력집중이 강화될 것으로 보십니까?' 라는 질문에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7차 당 대회를 계기로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권력 집중이 강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.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'다소 강화'(53.0%), '매우 강화'(35.0%) 등 7차 당 대회 이후 김 제1위원장에 대한 권력 집중이 강화된다는 응답이 88.0%를 차지했다. 그밖에 '변화없다'(11.0%), '다소 약화'(1.0%)순으로 응답됐다.

〈 7차 당대회 강조 분야 〉




〈 권력 집중도 변화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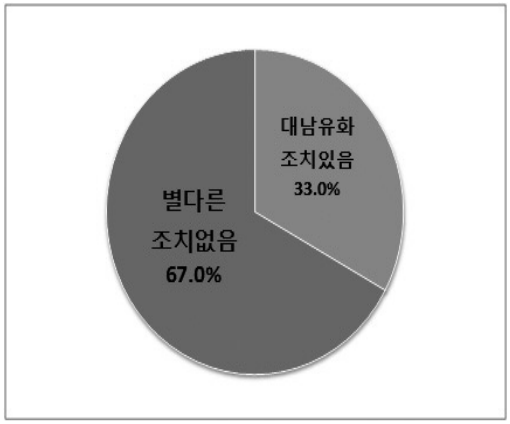



### 남북관계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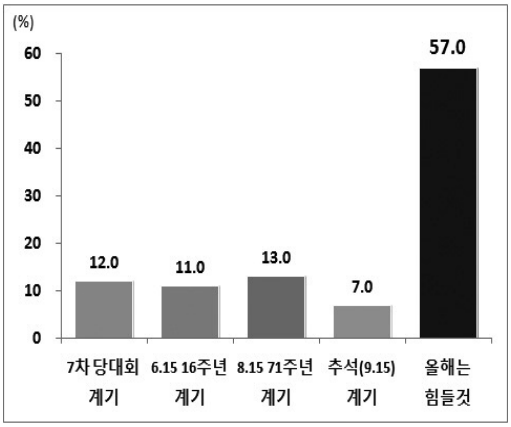
'금번 7차 당 대회에서 북한이 대남 유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십니까?' 라는 질문에 전문가 10명 중 7명은 북한이 7차 당대회에서 대남 유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. 한편 대남 유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응답은 33.0%를 차지했다.

'남북관계 개선 모멘텀이 언제쯤 마련될 것으로 보십니까?' 라는 질문에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올해 안에는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마련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. 한편, '8.15 71주년 계기'(13.0%), '7차 당대회 계기'(12.0%), '6.15 16주년 계기'(11.0%), '추석 계기'(7.0%) 등 올해 안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43.0%를 차지했다.

〈 대남 유화 조치 가능성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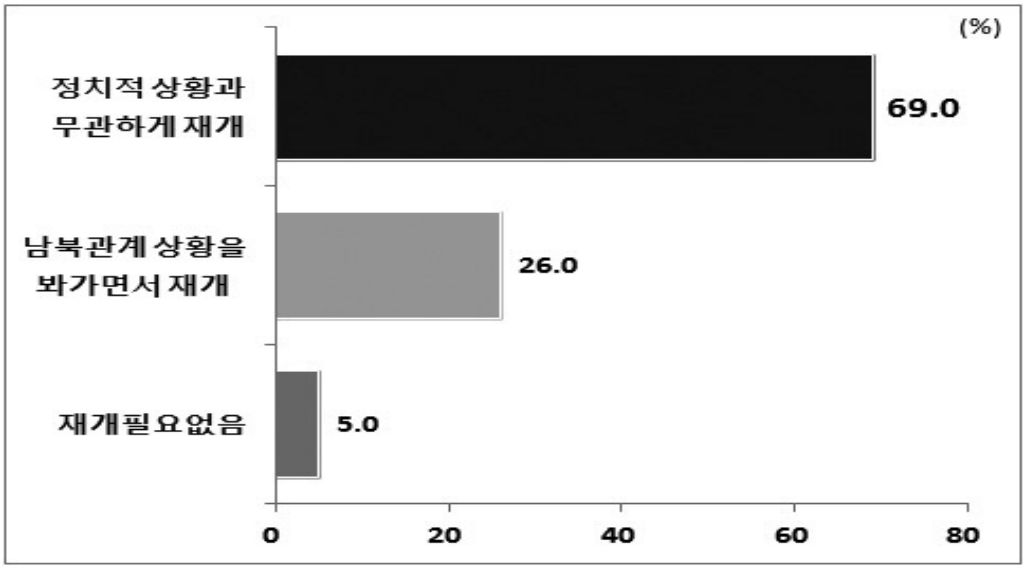



〈 남북관계 개선 모멘텀 〉




'향후의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' 라는 질문에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산가족 상봉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재개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. 구체적으로는 전문가들의 상당수는 '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재개해야 한다' (69.0%)고 응답했고, 그밖에 '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면서 재개해야 한다' (26.0%)와 '재개할 필요없다' (5.0%)순으로 응답됐다.

〈 이산가족 상봉 재개 필요성 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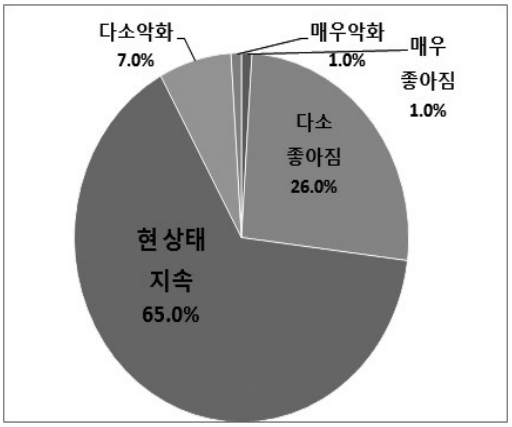
### 북한의 대외관계와 북핵문제

'금번 7차 당 대회 이후 북미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십니까?' 라는 질문에 전문가 10명 중 7명(65%)은 별다른 관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. 다만, '다소 좋아질 것' (26.0%)과 '매우 좋아질 것' (1.0%) 등 긍정적 응답은 27.0%, '다소 악화될 것' (7.0%)과 '매우 악화될 것' (1.0%) 등 부정적 응답은 8.0%로 긍정적 기대감도 남아있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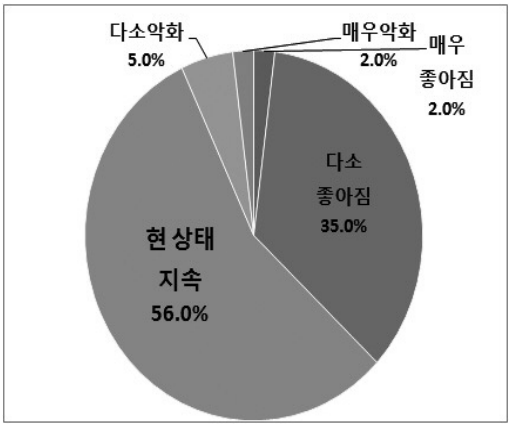
'금번 7차 당 대회 이후 북중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십니까?' 라는 질문에 전문가 10명 중 6명(56.0%)은 7차 당 대회 이후에도 북중관계에 별다른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있다. 다만, '다소 좋아질 것' (35.0%)과 '매우 좋아질 것' (2.0%) 등 긍정적 응답은 37.0%, '다소 악화될 것' (5.0%)과 '매우 악화될 것' (2.0%) 등 부정적 응답은 7.0%로 긍정적 기대감도 남아있었다.

이는 2016년은 북중우호조약 체결(1961.7) 55주년을 맞는 해인만큼 북미관계에 비해서는 북중관계 개선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.

〈 북미관계 전망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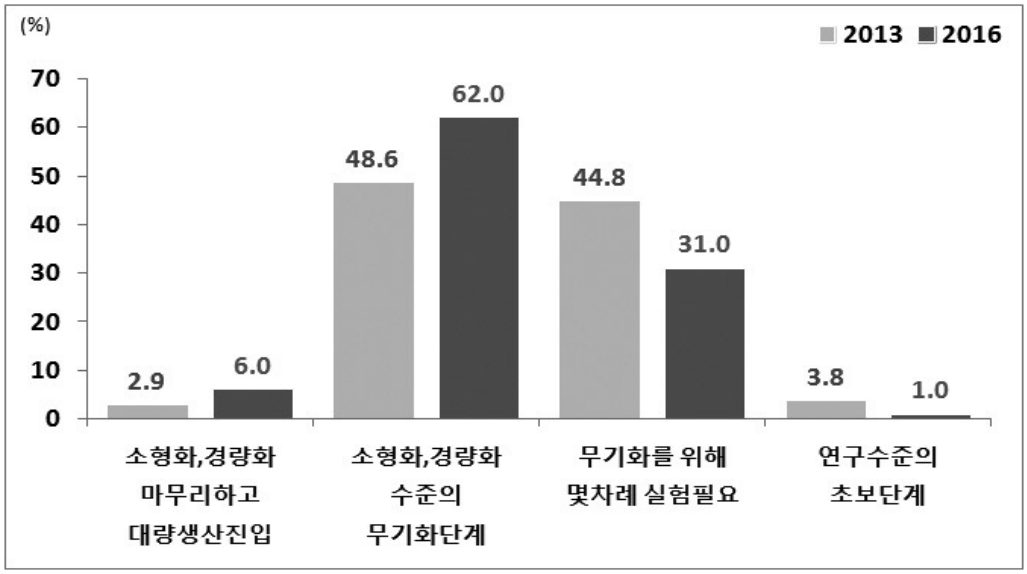



〈 북중관계 전망 〉



'북한의 핵 무기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?'라는 질문에 4차 핵실험으로 '소형화 · 경량화'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다수였다.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[4]와 비교할 때, 전문가들은 4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 수준이 진보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문가 10명 중 6명은 '소형화 · 경량화 수준의 무기화 단계'(62.0%)에 진입한 것으로 응답했다. 이는 동 질문에 대한 2013년 응답 48.6%에 비해 13.4%p 상승한 수치이다. 또한 '무기화를 위해 몇 차례 실험이 필요'(31.0%)하다는 응답은 2013년 44.8%에 비해 13.8%p 하락했다. 한편 '연구 수준의 초보 단계'(1.0%)라는 응답은 2013년 3.8%에 비해 줄어든 반면, '소형화 · 경량화를 마무리하고 대량생산에 진입'(6.0%)했다는 응답은 2013년 2.9%에 비해 늘어났다.

〈 북한의 핵개발 수준 〉




4) 본 연구원이 2013년 7월 19일~31일 (13日간) 연구원, 교수, 남북경협 기업대표 등 통일 외교 안보 전문가 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..